

---

# 최근 고용·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

---

2018. 10. 24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I . 최근 고용·경제 동향 .....	1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.....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경제활력·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.....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..	1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3. 분야별 애로해소 및 일자리 지원 .....	13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[별첨] 실행계획(Action Plan) .....	1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요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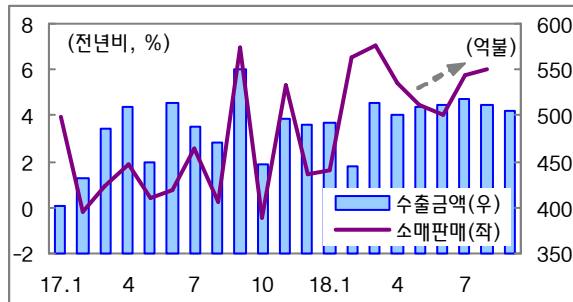
- 수출·소비는 견조하나,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 어려움 지속
  - 미·중 통상마찰 심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
  -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부진 흐름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
- 경제·고용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추진
  - 경제 역동성 회복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추진
  - ① 민간·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·기업 활력 제고
    - 막혀 있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고,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투자사업 연내 선정·추진
  - ② 원격협진·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
    -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「산업구조 고도화 전략」 연내 구체화
  - ③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
    - 이와 동시에 서민·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, 업종·계층·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
- 이번 대책에 이어 일자리 창출, 혁신성장,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(12월)

## I 최근 고용·경제 동향

### ① 투자 부진 지속되며 경제활력·고용창출력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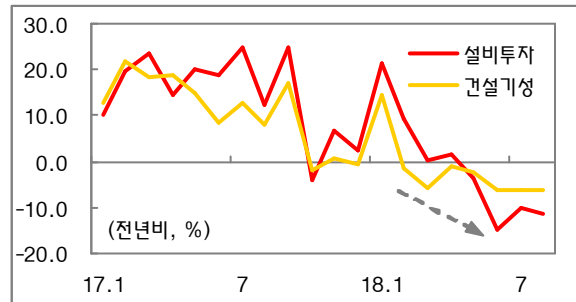
○ 수출·소비 등은 견조하나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

수출·소비 추이



\* 자료 : 통계청, 관세청

설비·건설투자 추이



\*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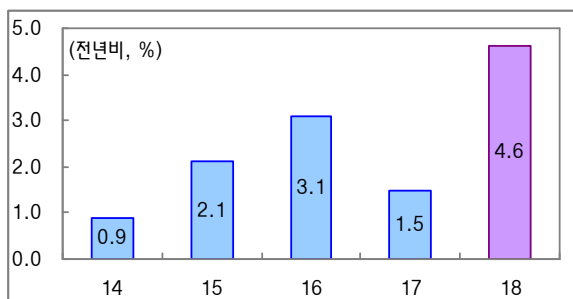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확대, 반도체 투자 일단락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능력·일자리와 직결된 기업 투자 감소세 지속
- 고용창출력 높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투자 둔화, SOC 위축 등으로 부진

### ② 고용은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하는 등 어려움 지속

○ 상용직 비중 증가, 실질임금 상승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은 개선되나, 하반기 취업자 한 자릿수 증가 등 양적 어려움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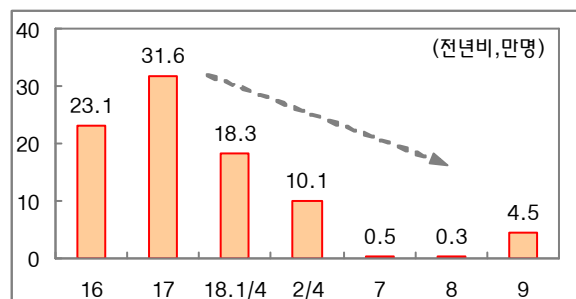
\*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(%) : ('17.1~8)67.3 → ('18.1~8)68.6

실질임금 추이(1~7월 기준)



\* 자료 : 고용노동부

취업자 증감 추이



\* 자료 : 통계청

○ 구조·경기·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하며 고용창출력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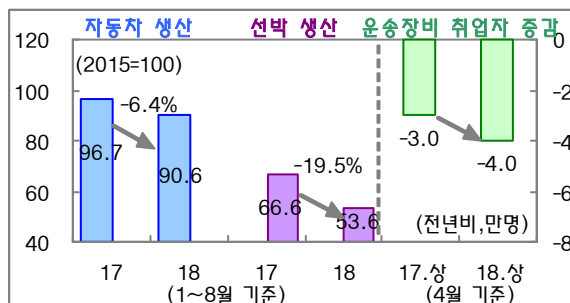
▪ 자동차,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 확대

\* 제조업 취업자(만명) : ('17)△1.8 ('18.上)△2.3 ('18.3/4)△9.1

▪ 건설업 및 숙박음식·도소매 등 일자리 효과가 큰 내수 업종 위축으로 관련 임시·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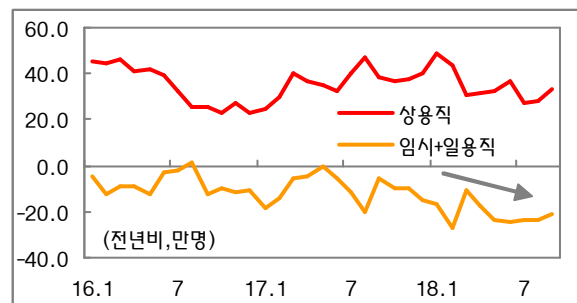
\* 건설+숙박음식+도소매 임시·일용직(만명) : ('17)△1.3 ('18.上)△10.8 ('18.3/4)△10.1

차·조선 생산 및 취업자 증감



\* 자료 : 통계청

종사자 지위별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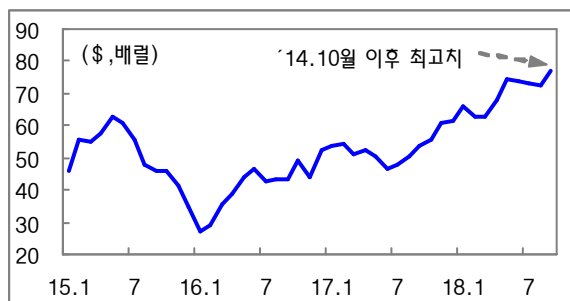
\* 자료 : 통계청

### 3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·경제상황 추가 악화 우려

○ 美中 통상마찰 심화, 중국경제 둔화, 유가상승 등 대외리스크 확산으로 수출·내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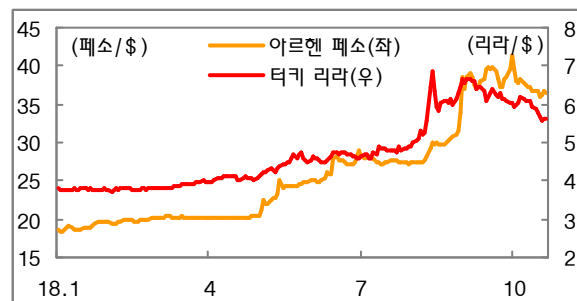
○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심화시 실물·금융 영향 우려

유가 추이



\* 자료 : 석유공사, 두바이유 기준

금년중 신흥국 환율변동 추이



\* 자료 : 블룸버그, 10.22일 기준

## II

##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

투자 활성화	<b>① 민간투자 활성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</li> <li>▶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강화</li> <li>▶ 스마트산단 본격 구축</li> </ul>
	<b>② 공공투자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역 투자프로젝트 연내 선정·지원 및 입지규제 개선 병행</li> <li>▶ 주거, 환경·안전 등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</li> </ul>
혁신 성장	<b>① 핵심규제 혁신 :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혁신 1차 추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협진 활성화</li> <li>▶ 교통·숙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확대</li> <li>▶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통한 규제완화</li> </ul>
	<b>② 산업구조 고도화 (Innovation Dynamics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(연내 추진전략 마련)</li> </ul>
분야 별 애로 해소 · 일자리 지원	<b>① 업종별 지원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동차, 조선, 섬유, 문화·관광 등 업종별 지원 강화</li> </ul>
	<b>② 서민·자영업자 지원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류세 15% 한시 인하('18.11.6~'19.5.6)</li> <li>▶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확대</li> </ul>
	<b>③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구체화</li> <li>▶ 5인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(13→15만원) 연내 시행</li> </ul>
	<b>④ 계층별·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맞춤형 일자리 5.9만명 지원, 위기지역 일자리·투자사업 확대</li> <li>▶ 청·장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3.5만명 지원</li> </ul>

## 1. 경제활력·일자리 확충 위한 투자 활성화

### ① 민간투자 활성화

#### ① 투자어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

○ 신속한 행정처리,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

▪ 1단계로 '19년 상반기까지 2.3조원+ $\alpha$  착공 지원

\* 2단계 포함시 6조원+ $\alpha$  예상

#### 【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】

##### 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(1.5조원)

- ▶ A기업은 기존 산단 개발계획의 축소·변경으로 공장부지 확보 곤란  
→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개발하여 공급

##### ②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·공급(0.35조원+ $\alpha$ )

- ▶ 여수 국가산단내 B기업 등 4~5개 업체의 저장시설·공장 용지 등 부족  
→ 국가산단 인근의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·개발하여 공급

##### ③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(0.45조원)

- ▶ C기업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시 인근업체의 설비안정성 저하 우려  
→ 연구용역('18.8~'19.7) 통해 안정성 등이 확보된 매립방안 마련

○ 투자·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투자프로젝트 지원 연내 추진

\* 예) 대·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,  
MICE·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 등

## ②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·세제지원 강화

○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업투자 촉진

※ 자본적정성, 손실률 등 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 강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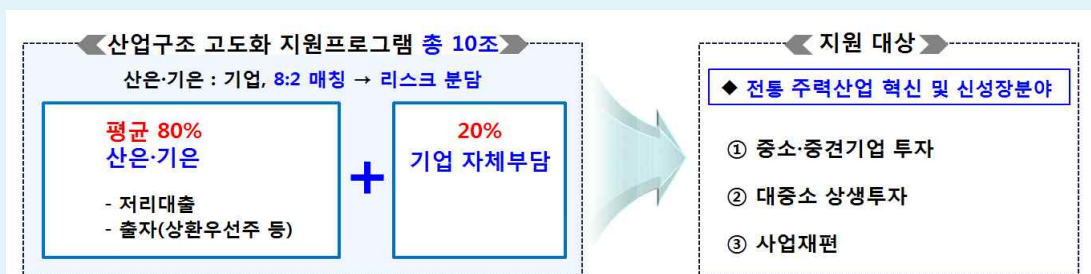
① 10조원 규모의 「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」 마련(연내)

▪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 위주(재원의 80% 이상), 전통 주력산업 혁신,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 집중 지원

▪ (방식) 산은·기은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% 수준 지원  
→ 대출, 출자 등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

\*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 감안하여 필요시 100%까지 지원

### ※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구조



② 5조원 규모의 「환경·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」 마련(연내)

▪ (대상) 중소·중견기업의 환경·안전 분야 시설투자, 노후설비·건축물, 생활 SOC 개선 등 지원

▪ (방식) 산은·기은이 소요자금을 저리(금리 1%p 인하) 지원

⇒ 「관계기관 TF」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, 기업의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하여 지원

※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·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 적용 추진



- **중소·중견기업**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**모든 설비투자**에 대해 **가속상각 확대 적용**(감가상각기간 1/2로 단축)

\* (現) R&D,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국한('18년 세법개정안)

### ③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

- 기존 부처별 **노후산단 지원사업**을 **전면 재설계**하여 제조업 혁신을 위한 **스마트산단 구축** 추진

\* 산단 재생(국토부, '19년 600억원), 리모델링(산업부, 2,900억원), 스마트공장(중기부, 2,350억원) 등

- 산단내 **인프라·시설 첨단화** 및 **정주여건 개선**

\* 유희 설비·시설 공유, 드론 화재감지, IoT 대기센서 설치,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

- 스마트산단내 입주기업에 **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<sup>1)</sup>**를 우선 지원하고, 「**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<sup>2)</sup>**」 확산

1) 지능형 로봇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R&D지원 강화 병행

2)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체 자금·기술력으로 中企의 스마트화 지원

- 스마트공장 **전문 운영인력** 양성을 위한 **교육시설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**을 산단내 **신규 구축·운영**(‘19년 2개소, 400명)



-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대상 산단 선정 후 연내 추진

-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단별 스마트화 전략 수립 및 사업 신속 착수

\* 예) 경남 창원 : 기계산업 집적 → 지능형 기계장비 고도화 기반 구축 집중 지원

#### ④ 유턴기업 보조금·세제·입지지원 대폭 강화

-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**보조금 지급·세제감면**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, **입지지원**도 대폭 강화

##### ※ 유턴기업 지원제도 변화

【현행 → 개선】	대기업		중소·중견기업	
	완전복귀	부분복귀	완전복귀	부분복귀
<b>입지·설비보조금</b> (기업당 최대 100억원)	<u>× → ○</u>	<u>× → ○</u>	○	<u>× → ○</u>
<b>법인세 감면</b> (완전복귀: 5년 100% 2년 50% 부분복귀: 3년 100% 2년 50%)	○	<u>× → ○</u>	○	○
<b>관세 감면</b> (완전복귀: 자본재 수입 100% 부분복귀: 자본재 수입 50%)	<u>× → ○</u> (감면한도 없음)	<u>× → ○</u> (감면한도 없음)	○ (최대 4억원 → 감면한도 폐지)	○ (최대 2억원 → 감면한도 폐지)
<b>입지지원</b>	산단 우선입주 → <b>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,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감면(최대 100%) 등 추가</b>			

\* 밑줄 표시한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

- ▶ **【완전복귀】**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후 국내로 이전
- ▶ **【부분복귀】** ① 국내사업장 無 : 해외사업장 유지·축소하고 국내로 이전  
② 국내사업장 有 : 해외생산량 50% 이상 축소하고 국내 이전

- 既복귀기업·유턴 희망기업 등 업계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「**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**」 마련·발표(11월)

\* 예) 현행 제조업에 한정된 유턴기업 대상 업종 확대, 유턴 희망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, 정부정책사업(스마트공장·R&D 등) 참여 우대 등

## ② 공공투자 확대

### ①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추진

-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·물류 기반,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
  -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내 선정·지원
    - \* 관계기관 TF 구성(10월말) →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방안 마련(11월)  
→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('18~'22)에 반영·확정(12월)
  -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 강구
-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및 부담완화 추진
  - 효율성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(국방부)
  - 낙후지역 개발시 부담금(대체산림조성비, 농지보전부담금 등) 감면(50%) 대상 확대
    - \* 【감면대상】 (現) 체육·공원시설 등 → (改) 산업·물류·관광단지 등 확대 검토
-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제한 완화
  - \* 예) 설치면적 한도 : (실내생활체육시설) 1,500㎡→3,000㎡, (도서관) 1,000㎡→2,000㎡
  -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단 조성시, 용지의 10%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
    - \* (現) 해제 前 개발제한구역內 위치하고 있던 중소기업에게만 공급

## ②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

- 주거, 환경·안전,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**주요 공공기관 투자 8.2조원 확대**(‘18년 17.9조원 → ‘19년 26.1조원)

### ※ 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확대

‘18 → ‘19년(조원)	주요내용
<b>주거</b> (10.8 → <b>15.2</b>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공임대주택 건설, 신도시·택지 개발, 주거복지 등</li> <li>* 공공주택 지구 등 확대(‘17년말 245개, ‘19년 17개 지구 확대)</li> <li>* 임대주택 운영 물량 확대(‘18년 113.5 → ‘19년 계획 123.1만호)</li> </ul>
<b>환경·안전</b> (5.7 → <b>6.5</b> 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후 발전소(미세먼지 저감 등), 댐·상수도, 철도시설 등 시설 보완</li> <li>* 당진화력 1~4호기, 태안화력 3~4호기 환경설비 개선, 한울 1,2호기 설비보강 사업 등</li> </ul>
<b>신재생에너지</b> (1.4 → <b>4.4</b> )	▶ 연료전지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

### ※ 공공기관의 생활 SOC시설 투자·개방도 경영평가 반영 등 통해 확대 유도

- **노후상수도 정비** 지원 대상을 **군 →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**

\* (당초계획) ‘21년부터 시지역으로 확대 → ‘19년부터 조기 확대

- **산업·고용위기지역**(군산, 목포, 거제, 창원) 우선 지원 추진
-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**국비보조율 인센티브 확대**

\* (기본 보조율) 50%, (인센티브) 現 10~20% <최대 70%> → **10~30%** <최대 80%>

- 지자체가 민자 등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**지상공간에 생활 SOC 조성**시, 지상시설에 대한 **재정 인센티브 제공** 추진

\* 문화(보조율 40%)·체육(보조율 30%)시설 복합화시 국고보조율 인상 등

- 도심의 **노후청사 재개발**시 체육시설, 주차장 등 **생활 SOC 시설을 포함**하여 추진(선도사업 3건 우선 추진)

\* (선도사업) 舊부산남부경찰서, 舊충남지방경찰청, 舊천안지원·지청 (추가 검토)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

## 2.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

### ① 핵심규제 혁신

- ◇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 추진
  - 우선 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**스마트 헬스케어, 공유경제, 관광** 관련 규제부터 1차 추진
  - 향후 「**규제혁신 점검회의**(대통령 주재)」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규제혁신 지속 추진

### ①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·제약 활성화

- 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**범위·기준**을 설정하여 **스마트폰·웨어블기기**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
  - \*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  
→ ①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, ②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
- AI, 로봇 등 **혁신·첨단 의료기기**는 **별도 평가체계\***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
  - \* ①참고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  
②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해 보상체계 강화
- **첨단 바이오의약품**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**신속 허가제도**를 마련하고, AI·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지원 방안 마련
  - \*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및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 마련

### ②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

- 도서벽지 등 **의료취약지** 치매·장애인·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**의사-의료인(재활·방문간호 등) 간 원격협진 확대**

- 전문의 - 일반의, 거점 의료기관 - 1차 의료기관 등  
의사-의사 간 **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** 마련
- 의사-방문간호사 간의 **원격협진 활성화**
  - \* ① 가정방문간호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 변경 허용,  
②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중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등

### ③ 공유경제 확대

-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**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**하되,  
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**상생방안 마련 병행**
- 숙박공유 **허용범위 확대**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
- 공간·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**활성화**를 위한 **제도적 기반 마련** 및 **지원확대**

※ 연내 **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·발표**

### ④ 해양·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

- 「**해양관광진흥지구**」를 법령상 절차<sup>1)</sup>에 따라 조속히 지정하여  
**해안개발 입지규제 완화**<sup>2)</sup>

1) 해안내륙발전법령 개정(17.8월), 가이드라인 마련(18.9월), 지자체 신청접수 개시(18.10월~)

2) 해양관광진흥지구내에서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 완화, 건폐율·용적률 상향 등 가능

- 필요시 **신청요건 추가 완화** 검토(최소 개발면적, 투자 기준 등)

\* 현재 신청을 위해서는 개발면적 10만㎡ 이상, 200억원 이상 투자계획 등 필요

-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**산림휴양관광 특구**를 지정하여 **중첩된 산지규제 완화** 추진

\* 민관TF를 구성하여 특례범위·특구선정·수익금 환류 등 법제화 방향 논의

- 지역별 생태여건 등을 고려한 **친환경적 산지활용을 유도**하고,  
수익금의 지역경제·고용 등 **환류**를 위한 제도설계 병행

## ② 산업구조 고도화 (Innovation Dynamics)

- 글로벌 트렌드 변화,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하여 **산업구조 고도화** 추진
  - (범위) **신산업 창출**과 **주력산업 업그레이드**에 주력
    - \* 3대 플랫폼 및 8대 선도사업, 5대 신산업(미래차,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), 13대 혁신동력(지능형 로봇, 차세대 통신 등)과 함께 자동차·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포괄
  - (전략) 민간 주도로 **혁신의 「토대→활용→확산」 선순환 구조 강화**
    - (토대) ①**정부 주도의 핵심기술·인프라**에 대한 **선도적 투자**, ②**기업수요에 맞는 혁신인재 적극 양성**, ③**규제개선 가속화**
    - (활용) **업종간 융복합, ICT 적용** 등을 통한 **유연한 생산체계 확대**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
    - (확산) **상생·협력시스템** 강화로 혁신을 산업전반으로 확산, 「**창업-성장-구조조정**」의 **역동성 회복**으로 생태계 경쟁력 강화
- **민관합동 T/F** 가동하여 **연내 추진전략** 마련(경제장관회의 통해 발표)
  - \* 10.4일부터 총괄, 주력산업, 생태계 강화, ICT 확산, 금융 등 5개 T/F 운영중

### 【 검토과제 예시 】

- ▶ (**혁신 토대**) 주요 분야별 **데이터 플랫폼** 구축, **AI 허브** 구축, **수소경제**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, **융합 전문인력** 양성 등
  - ※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연내 마련
- ▶ (**혁신 활용**) 스마트산단 확대 등 **스마트전략 업그레이드**, 제조·유통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 구축 지원, **제조-서비스간 융복합 활성화**, **정책금융 개편** 등
  - ※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방안 별도 마련
- ▶ (**혁신 확산**) 대기업의 **상생리더십** 유도, **산학연 연계** 강화, 사업재편·M&A 활성화 등 **시장 구조조정 기능 강화**, **혁신형 고용안정모델** 구축 등

### 3.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

#### ① 업종별 지원 강화

- (자동차) 자금조달 애로 해소 위해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·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

\* (보증비율) 85 → 90% (보증료율) 평균 1.3 → 최대 1.0%(△0.3%p 인하)

- (조선) 「조선사-기자재업체-정부」 상생 프로그램 등 신설하여 기자재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(0.3조원)

\* 조선대형3사 및 정부 출연금 등을 토대로 신보·기보·무보가 제작금융 등에 보증

- 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보증 지원 확대

\* (現) 신보 보증<70억원 한도, 0.1조원> + (추가) 무보 보증<70억원 이상 가능, 0.1조원>

- (섬유·패션) 봉제·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, 고객맞춤형 제조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지원('19~'21년 110억원)

- IT기술 융합 스마트섬유 개발 및 사업화 지원('19~'21년 64억원)

- 노후된 생산·환경설비 교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

\* 신성장기반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하여 시설 교체 유도(목표 800억원)

- (문화·관광) 게임·애니메이션·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 펀드를 3,600억원 추가 조성(~'19년)

- VR·AR 활용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 확대  
('18년 136 → '19년 269억원)



- VR 게임장업 법적근거 및 게임물 안전기준 마련

\* (법적근거) VR 종류(PC기반, 시뮬레이터 기반)에 따라 PC방·오락실·유원시설·복합영업 등으로 등록이 필요해 사업자 불편 야기 → 별도 업종 신설로 편의 제공

\* (안전기준) 구체적 기준 연구용역중으로 정기검사, 안전교육 의무 등 검토

※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위한 「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」 마련(11월)

- **관광지원서비스** 업종(예 : 여행보조·예약서비스업 등)을 신설하고,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지원대상에 포함

\* 기준금리(예: '18.4/4분기 2.27%) 적용, 중소기업 등의 경우 0.75~1.25%p 우대  
'19년도 구체적 용자지원 규모는 연말에 확정 예정('18년 연간 용자지원 총규모는 5,250억원)

※ **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** 관련 대책 마련(12월, 잠정)

## 2 서민·자영업자 지원 강화

- **유류세 15% 한시 인하**(수송용, '18.11.6~'19.5.6)

- 최근 유가상승,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영세 자영업자·중소기업, 서민** 등의 부담 완화

※ **유류세 15% 인하 효과**

	휘발유	경유	LPG 부탄
유류세 인하	746→635원/ℓ	529→450원/ℓ	185→157원/ℓ
세금인하폭 (최대 가격인하 가능폭)	△111원/ℓ (△123원/ℓ)	△79원/ℓ (△87원/ℓ)	△28원/ℓ (△30원/ℓ)

⇒ 6개월간 약 **2.0조원**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 기대

※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능

- **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용자** 지원 확대(현 2.00~2.96% 수준),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사('19년) **홈쇼핑 입점 지원**

\*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('18년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,500억원 증액)

※ **자영업 생애주기별 정책** 지원을 위한 「자영업 혁신 종합대책」 마련(12월)

---

### ③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

---

- 사회적 대화를 통해 **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**(현행 최대 3개월) 등 **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** 연내 구체화
  -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조화 되도록 단위기간 확대 및 임금보전 방안 등 제도개선
- 최저임금 영향 큰 **영세사업자**에 대한 **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**
  -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**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**(13→15만원) 연내 조기시행
- **시장과 긴밀히 소통**하면서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

---

### ④ 계층별·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

---

- 취약계층 지원·공공서비스 제고 **맞춤형 일자리 기회** 제공(5.9만개)
  - (일자리 수요) 청년 **일경험 축적·취업역량 강화**, 신중년 퇴직자 **이력효과 방지**, 어르신 소득지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
  - (일자리 공급) **필수 공공서비스, DB구축·실태조사** 등 꼭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
  - **고용·산업위기지역**은 **지역특화 일자리·투자사업** 확대
    - \* 예) 희망근로사업 확대,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확대, 주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
- **청·장년층 실업자** 등의 **취업역량 제고**를 위한 **직업훈련 3.5만명** 지원
  - 청·장년층에 대한 「**상담-훈련-취업**」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**취업성공패키지 3만명** 추가 지원('18년 19 → 22만명)

- **실업자 내일배움카드 5천명** 추가 지원('18년 24 → 24.5만명)

\*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, 훈련비 20~100% 지원

- 추가 일자리 지원은 추가 채용 투입 없이 이·전용, 예비비 등 **불용이 예상**되는 금년도 **예산**을 최대한 활용

- 고용·산업위기지역은 **목적예비비를 활용**하여 지원

-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**국비 지원, 국고보조율 인상** 등은 **예외적·한시적으로 지원**

- **지자체 매칭사업**의 경우 **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**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조치

\* 지역의견 수렴·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상정(10월말~11월초)

#### ※ 분야별 주요 일자리 지원사업

분야	주요 사업
<b>① 취업역량 제고 및 안전·재해예방 등 시급한 공공수요 충족</b>	
◆ 청년 일경험 축적	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지원, 정부부처·공공기관 지원인력 등
◆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	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확대
◆ 긴요한 공공수요 대응 (사고·재해예방, 안전·시설점검)	제품안전 라돈 측정서비스, 전통시장 화재 감시
<b>②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</b>	
◆ 행정 정보·실태조사, 필수 통계 DB구축	토지이용현황 조사(드론 활용 등),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전수조사, 국유재산 총조사 확대(빅데이터 축적)
◆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	
- 전문인력양성·정책사업 지원	자영업자 상권분석, 스마트공장 구축·운영 지원,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
- 공공서비스 질 제고	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 지원,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계도
<b>③ 어르신·실직자·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</b>	
◆ 취약계층 지원	농촌영농·어항·해양 환경 개선 지원
◆ 위기지역 지원	지역 환경정비, 행정정보 실태조사

## 별첨

## 실행계획 (Action Plan)

### 【 경제활력·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】

과제 내용	시기	부처
<b>① 민간투자 활성화</b>		
①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	'19.상반기내	국토부· 해수부 등
②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·세제지원 강화	연내	기재부 금융위
③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(산단선정)	연내	산업부 국토부 중기부
④ 유턴기업 보조금·세제·입지지원 대폭 강화 (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)	연내	기재부 산업부
<b>② 공공투자 확대</b>		
①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추진(사업 선정)	연내	균형위
②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· 공공기관 투자 확대 ·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대상 조기 확대	'19년중 '19.1월	기재부 등 환경부 등

### 【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】

과제 내용	시기	부처
<b>① 핵심규제 혁신</b>		
①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	'19.3월	복지부
②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	'19년중	복지부
③ 공유경제 확대(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)	연내	기재부 국토부 등
④ 해양·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·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· 산림휴양관광특구 법적근거 마련	'18.10월~ '19년중	국토부 문체부 등

과제 내용	시기	부처
<b>② 산업구조 고도화</b>		
○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전략 마련	연내	전부처

## 【 분야별 애로해소 및 일자리 지원 】

과제 내용	시기	부처
<b>① 업종별 지원 강화</b>		
① (자동차) 신·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	연내	금융위 중기부 산업부
② (조선) 기자재업체 보증 지원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	연내 '19.3월	중기부 산업부
③ (섬유·패션)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 지원	'19년중	산업부
④ (문화·관광) 관광, 콘텐츠 산업 진흥 대책 마련	연내	문체부
<b>② 서민·자영업자 지원 강화</b>		
① 유류세 15% 한시 인하	'18.11.6~ '19.5.6	기재부
②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(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마련)	연내	중기부
<b>③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</b>		
①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구체화	연내	고용부
②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	연내	고용부
<b>④ 계층별·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</b>		
① 맞춤형 일자리 기회 제공(5.9만개)	연내	전부처
② 청·장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(3.5만명)	연내	고용부